

www.krila.re.kr

지방자치 News & Issue

April 2013 Vol. 45 4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Local Administration

이달의 **issue**

논단
자치행정/지방재정/지역발전

Interview
김완주 전라북도지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자치 News & Issue 통권 제45호
 발행인 / 이승 중
 편집인 / 뉴스레터 위원회
 연락처 / T 02·3488·7300 / F 02·3488·7309
 디자인 / (주)소프트하우스
 본 뉴스레터는 매월 말 발간됩니다. 정기구독을 원하시는 분은
 성함, 연락처, 주소, 이메일 주소를 기입하여 아래 메일주소로
 신청하여 주십시오. (무료) newsletter@krila.re.kr

이달의 **issue** 박근혜정부의 지방자치정책 방향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권두언 지방에 살아도 살 맛 나고 행복한 대한민국
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논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새정부 지방분권의 방향 - 박근혜정부의 출범과 지방재정 개선과제 - 박근혜정부의 지역발전정책 방향
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nterview 김완주 전라북도지사

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치단체탐험 전북에서 만나는 전통문화의 향연
2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원 동정
2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알림마당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홈페이지에서 Newsletter 원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www.krila.re.kr

지방에 살아도 살맛 나고 행복한 대한민국



김관용
(경상북도지사, 전국시도지사협의회장)

1995년 6월 27일 4대 지방선거 실시로 출범한 민선지방자치가 18년이 지났다. 그동안 많은 진전이 있었지만 시행 초기에 가졌던 풀뿌리 민주주의에 대한 기대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 제대로 된 지방자치의 필수인 권한과 재정을 중앙에 그대로 남겨두고 시행했기 때문에 빚어진 문제다. 그래서 ‘불행한 지방자치’, ‘무늬만 지방자치’ 라는 자조적인 말도 생기게 되었다. 지방자치는 가장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것으로 검증된 제도다. 주민이 뽑은 대표가 주민과 함께 스스로 판단해서 결정하고 책임도 지는 생활자치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서구와 달리 밑으로부터의 요구나 지방의 의견이 반영되어 탄생한 것이 아니다. 당시 정치권과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결정에 의한 결과물이다. 그렇다 보니 방향은 옳았지만 내용이 부족할 수밖에 없었다. 문제는 성년이 된 지금도 실질적인 내용면에서 크게 달라진 것이 없어 지방자치가 제대로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민선자치 출범부터 줄곧 현장을 지켜오면서 위로부터 주어진 지방자치의 태생적 한계를 뼈저리게 느낄 때가 많다. 현재 국가사무와 지방사무의 비율은 7:3 정도다. 그마저도 지방이양사무는 대부분 단순사무 위주다. 재정문제는 더욱 심각해서 국세와 지방세 비중은 8:2 정도다. 더군다나 실제 집행은 6:4로 지방이 더 많다. 지방의 재정자립도는 해가 갈수록 악화되어 1997년 63% 이던 것이 지난해는 52.3%로 곤두박질쳤다. 지방세로 공무원 인건비를 해결할 수 없는 자치단체가 전체의 절반이 넘는 123곳에 이른다. 대다수의 지자체들이 국비 확보에 목을 매달 수밖에 없는 이유다.

이처럼 권한이 없고 재정이 취약한 구조이다 보니 주민 생활에 당장 필요한 사업들마저 제대로 손을 대지 못하는 일이 발생한다. 현장에 문제가 생겨도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 가장 큰 문제는 중앙 집중이 수도권 집중으로 직결되어 지역 간 불균형과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추풍령 이남의 비수도권 지역은 산업기반이 붕괴되고 인구가 감소하고 자본이 유출되는 등 자치기반이 흔들리고 있다.

역대 정부가 지방을 살리기 위해 노력한 점은 평가받을 만한 일이지만 성과는 미흡했다. 근본적으로 지방은 역량이 부족해서 안 된다는 부정적인 생각이 지배적이었고, 그에 따라 생존권 차원에서 즐기치게 주장하는 지방의 목소리마저 외면해 왔다. 산업화 시대에는 구미, 울산, 포항, 여수, 대전 등 지역별로 산업을 일으켰는가 하면 거점 국립대학을 육성하여 그나마도 지방에 희망이 있었다.

자식을 키워 분가를 해 주면 처음에는 좀 부족하더라도 야단도 치고 격려도 하면서 자기 힘으로 책임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 지방자치도 마찬가지라고 본다. 지방이 스스로 결정하고 책임지면서 자생력을 키울 수 있을 때까지 중앙정부의 정책적인 배려와 지원이 필요하다. 어렵다고 지방자치를 그만 둘 수는 없다.

그런 점에서 국민행복시대를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생활정치를 하겠다는 박근혜 정부에 기대하는 바는 매우 크다. 생활정치의 현장이 바로 지방이기 때문이다. 프랑스나 독일, 일본과 같은 선진국은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지방분권을 강화하고 있다. 우리도 지방자치의 완성을 통해 국가경쟁력을 확보하고 전체가 잘 사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고 본다. 그 해답은 민생의 현장인 지방을 국정의 동반자로 인정하고 실질적 지방자치를 실천해 나가는 데

있다.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서는 분권, 재정, 균형이라는 3대 아젠다를 함께 풀어야 한다. 실질적인 자치권이 보장되어야 하고, 자주재정이 확충되어야 하며, 중앙-지방간 소통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국회에 법률적 검토를 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고 중앙정부에도 지방의 의견이 국정에 반영될 수 있는 추진 기구를 갖춰야 한다. 대통령께서 취임사에서 밝혔듯이 ‘국가발전이 국민행복으로 선순환하는’ 새로운 미래를 향해 힘찬 출발을 했다. 침체되어 있던 지방자치에도 새로운 지평이 열리기를 기대한다.

시·도지사협의회는 앞으로 중앙과 지방의 협력 창구로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에 집중해 나갈 것이다. 지방에서도 책임질 부분은 책임지면서 국정철학이 지방에서 구체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현장을 지킬 것이다. 중앙과 지방이 상생하는 새로운 지방시대는 아래 위가 맞물려 돌아가는 국민 대통합의 전초단계라고 생각한다. 인구의 절반 이상이 살고 있는 지방을 살려야 통합과 발전의 새 시대를 열 수 있다.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지방에 살아도 살 맛 나고 행복한 나라, 희망의 새 시대가 열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

새정부 지방분권의 방향



김 병 국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자치행정연구실장)

18대 대통령의 민생정부가 출범하였다. 국가의 품격에 비하여 국민의 행복수준이 낮은 시대적 여건을 극복하기 위해서, 새 정부는 국민행복과 국가발전의 선순환을 통한 행복한 국민, 행복한 한반도, 신뢰받는 모범국가를 지향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를 위하여 새 정부는 국민행복을 최고의 가치로 하는 “국민행복, 희망의 새 시대”를 국정비전으로 설정하는 한편, 5개 국정목표(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 맞춤형 고용복지, 창의교육과 문화가 있는 삶, 안전과 통합의 사회, 행복한 통일시대의 기반구축)와 21개 전략과제를 추진하여 국정비전을 달성하려고 한다. 이러한 가운데 지방분권정책은 국정목표 4의 18전략인 “지역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의 촉진”에 근거하여 추진될 것이다. 이는 중앙정부 주도의 지방자치정책을 지방이 주도하고 중앙이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환하여 지방의 창의적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구체적으로는 국민대통합을 위한 지역균형발전, 지방대학 지원 확대, 지방재정확충 및 건전성 강화, 지방분권 강화 및 시민사회·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역경제와 산업의 활력 제고로 압축되고 있다. 현재 국정과제 중에서 복지와 안전 및 민생경제 부문의 당면과제가 강조되고 있어 새 정부의

지방분권 과제는 크게 부각되고 있지 않지만, 지방분권 추진체계 및 관련 제도개선을 통해 지방이 주도하는 진정한 지방자치의 실현, 그리고 정부와 시민단체 간 협력, 지역공동체 사업 추진, 시민단체의 자생력 강화 등을 통한 시민사회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민선지방자치 출범 30년을 바라보는 현 시점에서 보면, 지방이 주도하는 지방자치를 실현하려는 것은 다소 지체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부터라도 이를 적극 추진하기 위해서는 통합성이 아닌 분권성을 그리고 획일성이 아닌 다양성을 강조하는 지방자치를 구현해야 하고, 그리고 지방자치 본연의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제도의 기반 구축에서 제도의 효율적 운영으로, 지방자치단체 중심에서 지역주민(공동체 등 포함) 중심으로, 공무원의 역량 강화에서 주민생활의 삶의 질 개선으로 지방자치정책의 초점이 전환되어야 한다. 다시 말해서 중앙정부는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내용들을 보완하기 위한 새로운 제도들을 생산해 내는 것이 아니라 이미 완비된 자치제도들의 합리적 운용을 통하여 생산성을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또한 중앙정부도 지방자치단체도 혹은 지방공무원도 아닌 행정 서비스의 수요자이며 동시에 고객인 주민들이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데 지방자치정책의 초점이 있어야 한다. 결국 향후의 지방자치는 제도를 강조하여 참여를 유도하는 자치가 아니라 주민이 서비스의 공동생산자가 되도록 하는 생활자치를 강조하는 것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방향에서 국민행복시대에 부응하는 지방자치를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몇 가지 선결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있다. 김대중 정부에서 노무현 정부 그리고 이명박 정부에 이르기까지 지방분권을 위하여 다각적인 노력을 해 왔다는 것은 이 분야에 종사자들에게는 너무나 잘 알려진 사실이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노무현 정부의 7대 분야 47개 분권과제, 이명박 정부의 4대 분야 20개 분권과제가 추진되었다. 두 정부에서 표방한 분권과제들을 보면 대체로 중복적이다. 사무구분체계 개선,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 자치입법권 확대 등의 과제가 그러하다. 과제의 중복성이 있다는 것은 자치제도 개선이 지속적으로 필요함을 나타내거나 아니면 효과적으로 개선되지 못하였음을 시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시사점을 고려하여 새 정부에서는 다음과 같은 분권형 과제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새정부가 지향하는 국정목표를 달성하는데 지방분권 과제들이 일정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국가와 지방간의 역할분담을 새롭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중앙정부는 국민복지재정 확충 및 배분계획 등과 같은 전국적 기획을 수립하는 중추적 역할을 하고 지방은

이를 효과적으로 실천하는 단위별 맞춤형 복지정책의 계획을 집행하는 역할을 한다거나, 중앙정부는 다양한 미래성장동력산업을 설계하고 과학기술을 총괄하는 등의 창조산업을 주도하고 지방은 이를 실천하기 위한 지역인재풀 관리, 지역과학기술 기반구축 등을 행하는 역할로 분리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의미에서 현재 중앙과 지방간의 기능연계성 검토를 통하여 전면적으로 기능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 이와 동시에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그리고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간 중복된 기능들을 조정하는 분권개혁을 통하여 중앙과 지방의 7:3이라는 기능배분구조를 6:4로 전환시키고, 8:2의 재정구조도 7:3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적극적인 조치가 요구된다.

또한 신뢰받은 정부 구현을 위하여 과거 정부에서 추진했거나 미진했던 분권과제들에 대한 재검토를 통해 새로운 분권방향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과거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정비, 교육자치제의 개선, 자치경찰제의 확대 등에 대한 공약들이 이해관계자들의 논리에 휩싸여 아직도 명확한 방향을 정하지 못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정부의 명확한 의지가 표명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명박정부 하에서 입법화된 ‘지방행정체제개편에관한특별법’에 근거한 시군통합, 자치구의 법적 지위 변화, 읍면동 주민자치회 설치, 도의 지위와 기능의 재정립 등과 같은 지방분권의 기반이 되는 공간구조 개편에 대한 정부의 입장도 조속히 밝혀야 한다. 그래야만 특별법에 규정된 2014년 6월의 지방선거에 이를 반영할 수 있다. 2012년 6월에 그리고 2013년 6월까지 국회와 대통령에게 보고를 했거나 해야 할 개편 과제들이 적용될 2014년 7월 1일까지 시간이 얼마 남아있지 않기 때문이다. 만일 새 정부 초기에 이러한 개편 과제들에 대한 정책방향을 정하지 못한다면 이는 신뢰받는 정부를 구현하지 못하는 원인을 제공할 수 있다.

또한, 앞으로 새정부가 추진해야 할 분권의 기본방향을 다양성에서 찾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지방이 주도하고 중앙이 지원하는 방향으로 분권화를 이루려면, 우선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에 있어서 다양성을 적용하여 주민이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전향적 조치가 필요하다. 현재 시와 군은 물론 특별시, 광역시, 도는 기관대립형인 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라는 구도로 기관이 획일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인구규모와 자치단체의 성격이 다른 군과 시들의 집행 사무들이 동일하고, 소도시와 대도시의 기능 차별성이 없는 현재의 획일적인 구조들에서 벗어나 각기 특색있는 행정을 이행할 수 있는 다양한 기능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따라서 인구규모에 의한 차별성 있는 기능배분을 통한 차등분권을 실현하고, 인구규모가 5만 이하 군의 경우 현재의 기능을 축소하여 도의 역할을 강조하는 기능 다양화는 물론 군수와 의회가

대립하지 않는 기관통합형의 구성할 수 있는 조직의 다양화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 외에도 현재 적용되는 기초자치단체의 장과 의원 선출에 있어서의 정당공천제는 배제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정당공천 배제가 민주주의 원리에 배치된다면 그 여부를 각 지역주민들의 선택에 맡기는 방법도 있을 수 있다. 특히 광역시의 자치구에 대한 법적 지위 변화, 즉 준자치구 혹은 행정구로 전환하는 문제도 다양성이라는 시각에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양화의 경우 어느 경우라도 해당 주민들이 이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요구된다.

이상의 과제들 외에도 자치조직권의 이양, 헌법 개정을 통한 자치입법권의 확대, 지방의정역량의 강화 등 산적한 과제들이 있다. 이상에서 제시한 모든 분권과제들은 사실상 과거부터 주장되는 것들로, 문제를 모르는 것이 아니라 실천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새 정부의 바람직한 해결책 모색과 더불어 적극적으로 실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겠다. 분권과제의 해결은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안전과 통합의 사회를 구축하는 밑거름이 되며, 궁극적으로는 박근혜정부의 신뢰성을 높이는 길이 될 것이다.

박근혜정부의 출범과 지방재정 개선과제



임성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1. 박근혜정부의 지방재정 국정과제

2013년 2월 25일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였다. 새로 탄생한 정부답게 국정운영 전반에 걸치는 정책의 기초와 방향 그리고 내용에 대한 변화가 천명되었다. 언론매체를 통해 제시된 “박근혜 정부 140개 국정과제”에 기초할 때, 새 정부는 경제발전(창조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포함), 사회복지, 교육, 문화·관광 분야를 중심으로 정부(국가, 지방자치단체)의 기능과 역할에 새로운 변화와 동력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이 과정에서는 필연적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구조 및 운영시스템 전반에 걸쳐 다양한 변화가 나타날 것이다. 여기에는 중앙·지방정부간 관계(intergovernmental relations), 자원배분 구조·규모·배분시스템, 재정운영방식, 재정관리 등에 대한 구조개편이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박근혜정부의 140개 국정과제 가운데서 지방재정과 관련된 과제로는 “지역균형 발전과

지방분권 촉진” 부문에 속하는 2개 과제가 있다. 구체적으로 지적하면, 지방재정 확충 및 건전성 강화(114), 지방분권 강화 및 시민사회·지역공동체 활성화(115) 과제가 그것인데, 전자가 보다 확실한 지방재정분야 국정과제에 해당한다. 지방재정 확충 및 건전성 강화 국정과제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재원 비중 확대, 지방재정조정제도의 개선, 지방재정의 건전성 및 투명성 강화 등이 핵심과제로 포함되고 있다. 여기에서 자체재원비중 확대와 지방재정의 건전성 및 투명성 강화에 대해 간단히 언급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방재정의 자체재원(또는 자주재원) 강화문제는 지방재정의 활성화와 자치발전 차원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에 속한다. 이 문제는 90년대에 지방자치제도가 부활된 이후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부각되어 온 것이지만, 사실 괄목할만한 성과는 없었다. 그 이유는 현실적으로 조세법률주의 등의 요인에 의해 지방자치단체가 새로운 세원을 발굴하는데 많은 애로와 제약이 있기 때문이다. 선진국의 경험사례를 보더라도 국가 차원에서 새로운 지방세를 신설하지 않는 한 지방이 독자적으로 규모나 영향력이 있는 신 세원을 창조적으로 발굴하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웃 일본에서는 오래 전부터 “법정외세제도”를 도입하여 지방자치단체들이 창의적으로 세수를 확보할 수 있게끔 물꼬를 터주었지만, 그 종류만 많을 뿐 이들의 재정 기여도는 매우 미미한 실정이다. 이러한 사실을 인식할 때, 그 동안 언론매체나 대선공약 등을 통해 제시되었던 지방소비세의 세율 인상, 지방소득세 개편과 같은 국가 차원의 정책수단을 보다 정교하게 다듬어 실천하는 것이 자체재원을 실질적으로 강화할 수 있는 합리적 정책 선택이 된다. 만일 정부가 이러한 정책을 선택할 경우 지방세제도의 질적 개선과 함께 재정이전제도와의 새로운 균형이 모색되어야 한다.

둘째, 지방재정의 건전성 강화 과제이다. 재정 건전성의 중요성은 2008년에 글로벌 금융위기(global financial crisis)가 발생하면서 세계의 모든 나라들이 뼈저리게 공감하고 있는 바이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한 이후 경제적 위기상황에 내몰린 대부분의 국가들(포르투갈, 아일랜드, 이태리, 그리스, 스페인 등)은 하나 같이 높은 재정적자와 채무 수준을 보유한 반면 금융위기를 무난히 극복한 대다수 국가들은 재정상태가 상대적으로 양호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재정 건전성의 바로미터(barometer)라고 할 수 있는 공공채무와 재정운영 수지(즉, 재정의 적자와 흑자)가 지금까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모두 비교적 양호한 편이만, 국내외의 여건 변화를 감안할 때 앞으로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재정 건전성의

중장기 지속가능성을 결코 담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지방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서는 지방의 채무범위에 대해 보다 명확히 하는 한편 일반재정과 지방공기업 및 각종 준 재정(quasi-finance)이 업무와 채무를 편법적으로 과대 활용하는 행위를 차단하고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새로운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이와 함께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영의 흑·적자 상태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재정수지 관리체계를 정립해야 한다.

셋째, 지방재정의 투명성(fiscal transparency) 강화 과제이다. 재정 투명성 과제는 2000년대에 들어와 IMF, OECD 등 국제기구들이 가장 강조하는 재정운영원리 중 하나이다. 이는 국(주)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주는 정책통로일 뿐 아니라 궁극적으로 국민세금이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재정원리이다. 재정 투명성의 요체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모든 재정활동의 과정과 내용 그리고 결과 및 영향을 적시에 다양한 방법으로 국민에게 공개하는데 있다. 아울러 재정 투명성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각종 재정활동에 국민의 진정한 목소리를 반영하고 국민을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시키는 새로운 가버넌스(governance)를 필요로 한다. 쉽게 말해서, 국(주)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정부가 행하는 모든 재정활동을 국민의 욕구와 눈높이에 맞추어 공개하고 대화하는 것이 재정 투명성 강화의 핵심이다.

2. 박근혜정부가 관심을 두어야 할 지방재정 과제

여기서는 박근혜 정부가 국정과제로 선정하지 않았지만, 향후 국가 발전 차원에서 반드시 검토되어야 할 지방재정관련 국정현안에 대해 간단히 언급하고자 한다.

첫째, 국가의 중장기 비전 및 전략 차원에서 재정분권(fiscal decentralization)에 대한 방향성과 기본구조를 정립해야 한다. 현재 박근혜정부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재정관계 구체적으로, 재정분권에 대해 그 기초와 방향성을 분명히 제시하지 않고 있다. 예컨대, 노무현 정부는 지방분권과 재정분권에 대해 적극적인 정책적 입장과 로드맵(road map)을 제시한 바 있고, 이명박 정부는 재정분권에 대해 소극적 정책기조를 견지한 바 있다. 재정분권과 지방자치에 대한 단·장기 국정 기초를 정립하는 문제는 국가발전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그러므로 조만간에 이에 대한 정책기조와 단·장기 실천과제가 정립될 필요가 있다. 이 과정에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이 향후 어떠한 역학관계(권한, 의무, 책임, 견제 등)를 견지하고, 지방재정을 어떻게 확충하며, 분권의 수준과 한계를 어디까지 둘 것인지, 그리고

국민이자 주민이 어떠한 혜택을 누리고 또한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할 지 등에 대한 청사진이 제시되어야 한다.

둘째,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과세권(taxing power) 강화 문제이다. 박근혜정부는 지방재정 확충(지방세 강화) 문제에는 관심을 두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과세권 강화문제에 대하여는 소홀히 하는 듯하다. 지방세 과세권 문제는 앞으로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발전 여부를 결정하는 관건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것은 지방자치단체의 과세권이 실질적으로 담보될 수 있을 때 지역의 재정지출 증감이 지역주민의 재정부담 증감과 연계될 수 있고, 이를 통해 주민과 지방자치단체 간에 견제와 균형이 도모될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의 지방재정 운영구조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지출을 크게 확대할 때 그에 소요되는 자금을 자기노력이나 지역주민의 경제적 부담에 의해 충당하는 시스템과는 무관하다. 대부분의 경우 지출 증가가 상위정부(중앙정부, 광역자치단체)의 이전재정에 의해 충당되는 방식으로 재정운영시스템이 작동하고 있다. 이는 지방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현재는 지방채를 발행할 경우 형식적으로는 그 비용을 지방자치단체가 자비(자체재원)로 부담하지만, 실제로는 상위정부의 이전재원과 자체재원이 뒤섞여 부담되고 있다. 그 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가 아무리 많은 지방채를 발행하더라도(지방채 발행을 통해 낭비성 투자사업을 확대하더라도) 지역주민은 그와 관련해서 단 한 푼의 추가적 금전부담을 하지 않는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지역주민들이 지방자치단체의 지출 확대나 재정 건전성 악화(예컨대, 과도한 지방채 발행에 따른 재정 건전성 악화)에 대해 아무런 책무나 부담을 느끼지 못할 뿐 아니라 신경을 쓰지 않는다. 그 이유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상태에 어떠한 문제가 생기더라도 지역의 기업이나 주민들이 추가적으로 재정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는 선진국의 지방재정 운영구조와 확연히 차이가 난다. 여기에는 “자율과 책임”이라는 기제가 작동하지 않으며, 만일 이러한 현상이 만연된다면 지방자치나 재정분권이 내포하는 장점이나 효과가 나타날 수 없다.

“**현실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과세권을 강화할 경우 지역간 재정격차 문제가 심화되는 등 일부 부작용도 없지 않아서 전면적이고 완전한 수준의 과세권을 보장해주는 정책을 추진하기는 어렵지만, 지금보다 한 단계 진보된 차원의 과세권 강화정책은 반드시 필요하다(지방세 과세권 강화로 인한 지역간 재정격차 문제는 형평화 보조금 등 다른 조치를 통해 개선해 나갈 수 있다).**”

셋째, 국세와 지방세의 구조 변화를 모색하는 동시에 재정이전제도의 구성과 운영의 질적 개선을 도모한다. 지방자치 실시 이후 20 여 년 간 약 8 대 2 수준에서 국세가 주도하는 조세제도의 구조와 내용에 변화가 필요하다. 그 접근에 있어서는 국가 전체의 관점에서 소득과세, 소비과세, 재산과세의 중장기 적정 모형을 개발하고, 이를 토대로 국세와 지방세의 역학관계를 단·장기적으로 조정하는 시도가 요구된다. OECD 통계(Revenue Statistics)에 의하면 선진국의 중장기 추세는 전체 조세구조에서 재산과세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축소되는 경향이 뚜렷하다. 이는 여러 면에서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상 재산과세가 기간세원이 되는 것이 합리적이지만, 지방재정의 중장기 안정성과 지속 가능성 확보 차원에서는 지방세의 소득·소비·재산과세의 비중을 중장기 시야에서 적절히 조절해 나가는 접근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소득과세와 소비과세의 비중을 높이고 재산과세의 비중을 상대적으로 줄이는 접근이 필요하다(지방자치와 재정분권의 발전 차원에서 재산과세 중 보유과세의 비중은 중장기적으로 확장시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조세와 재정이전제도 간의 새로운 균형을 모색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이다. 지방세 확대를 전제로 할 때, 지방교부세 등 재정이전제도의 역할 조정이 필요하다. 그것은 국가의 재정자원이 제한된 상태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에 큰 기능과 역할의 변화가 없는 한 조세와 재정이전제도는 하나의 ‘거시적 세트(set)’ 내에서 ‘유연한 균형’을 이루는 것이 합리적이기 때문이다. 다만, 사회복지를 포함하여 지방의 역할과 기능이 강화되어 새로운 재정수요가 추가될 경우 지방세와 재정이전제도의 ‘재 균형’ 폭은 크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어떤 경우이던 지방교부세, 분권교부세, 부동산교부세, 국고보조금,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등 현재 얽히고설켜 있는 재정이전제도는 질적 관점, 제도 간 연계성 관점, 중장기 재정 안전성 및 효율성 관점에서 새롭게 변화되어야 한다.

박근혜정부의 지역발전정책 방향



김 선 기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역발전연구실장)

1. 지역발전정책의 문제제기

박근혜정부의 지역발전정책의 방향에 대해서는 그다지 분명하게 밝혀져 있지 않다. 지방분권이나 균형발전 등의 이슈가 보수정부의 관심사에서 다소 벗어나는 경향도 있지만 이전 정부에 이어 정권을 재창출했기 때문에 정책변경의 수요가 크지 않은 탓도 있는 것 같다. 그간의 논의과정으로 짐작컨대 지역발전정책의 비전, 목표, 추진전략의 큰 골격은 큰 변동 없이 기초를 이어나가되 성과가 부진했거나 시행착오가 빚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출범 초기에 새로운 방향전환을 모색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이명박 정부에서는 참여정부의 산술적 균형화로 빚어진 소모적 갈등을 극복하고 지역간 상생발전에 토대를 둔 광역경제권정책을 새롭게 도입하였다. 광역경제권정책은 세계적 광역화 추세에 부응하고 국내적으로는 소지역주의에 근거한 지역갈등을 극복함으로써 지역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새로운 전략이지만 큰 그림에 비해 세부 추진전략에 대한 깊은 통찰이 부족하여 만족할 만한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제도와 정책은 도입하였지만 광역권이 성공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권역의 영역적 정체성 확보, 상향적 정치과정, 광역화와 분권화의 동반 추진, 신제도적 토양 조성,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 등의 여건 조성에 실패함으로써 신지역주의의 이론적 측면이나 선진국 광역행정의 경험적 사례와는 괴리가 있으며, 뒤늦게 지역간 연계협력사업의 추진에 노력했지만 중앙정부 주도의 시범사업 수준에 그치고 있고 추진기간도 짧아 가시적 성과는 아직 미미한 편이다.

2. 지역발전 분야 국정과제의 이슈

신정부의 국정방향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제안한 「박근혜정부의 국정과제」에 정리되어 있다. 여기에서는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 맞춤형 고용·복지, 창의교육과 문화가 있는 삶, 안전과 통합의 사회, 행복한 통일시대의 기반구축 등 5대 국정목표와 추진기반으로서 신뢰받는 정부를 포함하여 총 23개 전략과 140대 국정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이 중에서 지역발전정책과 직접 관련이 있는 전략으로는 “지역균형 발전과 지방분권 촉진”을 꼽을 수 있다. 이 전략에는 ①국민대통합을 위한 지역균형발전, ②지방대학 지원 확대, ③지방재정확충 및 건전성 강화, ④ 지방분권 강화 및 시민사회·지역공동체 활성화, ⑤지역경제와 산업의 활력 제고 등 5대 국정과제가 포함되어 있는데 국정과제로부터 지역발전정책의 새로운 정책이슈를 몇 가지 추려 볼 수 있다.

첫째, 지역균형발전의 지속적인 추진이다. 기존의 산업 중심의 광역경제권정책을 개편 또는 보완하여 경제권과 도시생활권을 연계하는 주민체감형 균형발전정책을 지향하고 있다. 이를 위해 지역중추도시권 육성, 지방특화산업단지 개발, 동서통합지대 조성 등의 시책을 제안하고 있으며 지역발전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하여 지역발전의 주도적 추진주체로 위상을 재정립할 계획이다. **둘째, 지방거점대학 육성 및 특성화로서 이전 정부의 정책을 계승하는 과제이다.** 지방대학을 지역성장의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지역대학이 소재 지역의 산업발전 및 일자리 창출 거점이 되도록 ‘(가칭)지역거점대학 육성사업’ 추진하고, 작년부턴 시작한 ‘산학협력선도대학(LINC) 사업’을 통해 현장적합성 높은 인력양성, 대학 특성화 및 지역산업과의 동반성장을 견인할 계획을

밝히고 있다. 셋째, 지역공동체의 활성화이다.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과 안정적 국정 운영을 위해 시민사회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통한 사회적 자본을 구축하고자 하며 이를 지역발전의 새로운 주체로 활용함으로써 지방의 부족한 역량을 보완하고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축할 계획이다. 넷째, 일자리 창출 중심의 지역산업체계 개편이다. 지역사업 지원의 비효율성과 복잡한 사업구조 개선 등을 통해 수도권 집중의 불균형 현상을 완화하고 지방의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력을 제고할 계획이다. 특히 중앙정부 중심의 지역산업체계를 개편하여 산업육성에서 지자체의 자율성과 연계성을 확대하여 지역특화산업의 지원을 지자체가 주도함으로써 지역일자리 창출을 도모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박근혜정부의 국정과제 중 지역발전정책〉

국정과제	지역발전정책 이슈	주요 추진사항
국민대통합을 위한 지역균형발전	지역균형발전의 지속적인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중추도시권 육성 ○ 지역특화산단 개발 ○ 동서통합지대 조성 ○ 지역발전 추진체계 개편
지방대학 지원 확대	지방거점대학 육성 및 특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거점대학 육성사업 추진 ○ LINC 사업 추진
지방분권 강화 및 시민사회·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역공동체의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공동체 활성화 ○ 시민단체의 자생력 강화
지역경제와 산업의 활력 제고	일자리 창출 중심의 지역산업체계 개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자리 창출 중심의 지역산업 정비 ○ 정부-지자체-기업 투자협약제 도입 ○ 지자체 중심의 지역특화산업 지원체계 구축

3. 박근혜정부의 지역발전정책 방향

박근혜정부의 지역발전정책이 위에 열거한 국정과제에만 국한하는 것은 아니며 산업, 일자리, 농촌개발, 과학기술, 교육, 복지, 문화, 환경 등 다양한 분야의 국정과제와 연관을 맺고 있다. 따라서 고령화·저성장 시대에서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고 삶의 질을 충족시켜 선진국으로의 도약하기 위해서는 국내외 여건과 환경의 변화에 부응하는 지역정책의 새로운 대응이 필요하다.

첫째, 지역발전정책의 궁극적 목표를 “주민행복의 극대화”에 두고 주민의 삶의 만족도를 향상시키는데 주력해야 한다. 지역발전정책과 투자가 모든 지역에 걸쳐서 최종 수혜자인 주민의 행복 또는 삶의 질과 직결되도록 정책체계를 개편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이제는 지역의 경제적 부와 인프라를 증대시키는 것보다 주민의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것이 보다 중요한 시대에 와 있다. 산업과 인프라 중심의 거창한 지역개발사업 보다는 소득, 일자리, 복지 등과 같이 주민체감형 지역발전정책을 통해 정책의 대국민 수용성이 높여야 국민이 행복한 시대를 구현할 수 있다.

둘째, 새 정부의 지역발전정책이 양극화를 해소하고 상생발전을 추구하는데 기여해야 한다. 최근 심화되고 있는 지역간 격차, 계층간 격차, 세대간 격차 등 다차원적인 양극화현상을 극복하고 더불어 행복한 상생발전을 지향함으로써 국민통합의 시대를 실현해야 한다. 이는 새 정부의 통치이념과도 부합할 뿐 아니라 균특법이 지향하는 목표와도 일치하며, 국민 모두가 어느 곳에 살든지 최소한의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소외된 계층과 지역에 대한 배려를 확대하여야 한다. 셋째, 지역공동체의 적극적 육성을 통해 고령화로 인한 지방의 인적 추진역량을 보완하고 나아가 전통적 공동체의 해체와 복지수요에 충족에 대한 정부역할의 한계 등을 극복하여야 한다. 즉 조직화된 주민집단으로서 지역공동체를 육성하고 공동체사업을 지원함으로써 공동체의 집단적 선도와 참여를 통해 소득과 일자리를 창출하고 부족한 인적 역량을 보완해야 한다. 아울러 건전한 공동체 활동의 활성화를 통해 신뢰, 협동, 나눔 등의 가치를 확산하고 사회적 자본을 확충하여 통합의 사회를 지향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지역발전정책의 추진과정에서 지자체의 기능과 역할 및 책임을 확대하여 자율분권형 추진체계를 정착해야 한다. 특히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의 토대가 되는 지역산업정책을 전면 개편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조정이 필요한 전략적 산업을 제외한 지역별 특화산업의 지원·육성은 해당 지자체에 맡김으로써 지방의 추진역량을 축적하고 지역의 특화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지역산업 추진체계의 이원화가 필요하다.

새 정부에 바라는 지방자치정책의 방향



김완주
전라북도지사

“바쁘신 중에 인터뷰를 허락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전라북도를 경영하시면서 가장 관심을 기울이신 핵심적인 시책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세계경제가 내리막길을 걷고 저성장의 구름이 짙게 드리운 가운데도 전라북도는 혼신의 노력을 다해 매년 100개 이상의 기업을 끌어왔고, 1만 3천개의 일자리 만들었습니다.

민선 4, 5기 기간동안 새만금사업과 5대 성장동력산업을 중심으로 미래 먹거리로 키워나갈 밑그림을 그렸습니다. 새만금사업은 「새만금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과 새만금신항만, 철도, 내부 간선도로 건설 등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으며 성장동력산업은 제조업 분야 4개(자동차·기계산업, 녹색에너지산업, 식품·생명산업, 융복합소재 산업)와 관광서비스산업으로



다섯 개 분야의 산업의 기초를 다져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군산항이 2.5GW 서남해안 해상풍력발전 지원항만으로 선정되었고, 국가식품클러스터가 식품전문단지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또한, 한국식품연구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첨단방사선연구소, 한국생명과학연구원 전북분원 등 정부출연 R&D 연구기관 유치와 OCI(10조), 삼성(7.6

조), 일진머티리얼즈(1조원), 효성(1.2조원) 등 1조원 이상 대규모 투자유치를 비롯해 5년 연속 100개 이상 기업유치를 달성하여 지금까지 798개(민선 4기 478+민선 5기 320)의 기업을 유치하였습니다.

중소기업 중심의 맞춤형 인력양성을 위한 산·학·관 커플링산업(대학, 특성화고) 확대하고, 인력, 자금, 마케팅 지원, 고용애로 해소 등 중소기업 지원시스템을 강화하였습니다.



-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장기저리자금 적기 지원(1,600억원)
 - 창업자금 950억원, 경영안전자금 600억원, 벤처자금 50억원
- 정책자금 이차보전으로 금리부담 경감(100억원)
- 지역경제 활성화 펀드 투자로 중소·벤처기업 육성 지원(75억원)

“

지사님께서 지사직을 수행하시면서 가장 보람 있었던 일이 있었다면, 어떤 일들이 있습니까?(그 동안의 업적, 실적 등)

”

뛰니뛰니 해도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명 “새특법” 제정이 가장 핫한 이슈라 할 것입니다. 새만금 추진체계를 일원화 하고 안정적 재원확보를 위해 ① 새만금 개발청 설치, ② 특별회계 설치 ③ 분양가 인하 등 새만금 개발 3대 현안을 골자로 한 새특법 개정은 ‘12. 11월 여야공동으로 172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국회 본회의 통과까지 18일 걸린 “새특법” 제정이 ‘내 생애 가장 뜨거운 18일’ 로 기억될 것입니다.

그동안 농림부, 문광부 등 6개부처의 용도별 내부개발계획으로 추진되던 사업이 이제 개발청으로 일원화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개발 곤란의 한계를 극복하고 전문성과 효율성을 갖춘 개발이 가능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이는 1989년 새만금사업 기본계획을 수립이후 23년간 끌어오던 새만금사업의 최대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새특법의 실질적 효력을 갖기 위해 이를 세부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시행령, 시행규칙을 제정하는 등 후속조치에 다시한번 도민의 역량을 결집하고 전북도에서는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

새롭게 출범한 정부에서 전북의 발전과 지방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중점적으로 지원하고 추진하여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핵심 과제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첫째, 지방을 국가발전동력화하기 위해서는 지방을 지역발전의 주체로 인정하는 지방분권이 절실합니다. 조례입법권 확대, 지방감사제도 개선, 자치조직권 보장 확대, 국가사무의 지방이양, 특별행정기관 지방 일괄이양, 지방자치-교육자치 일원화, 자치경찰제 등의 분야에서 추상적인 개념보다는 구체적인 사례를 통한 지방분권 확대 추진되어야 합니다. 지역 주도의 중소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지방중소기업청, 지방고용노동청, 지자체, 테크노파크, 경제통상진흥원 등이 통합적 운영이 시급하나, 특행기관과 지자체로 2원화 구조로 되어있어 효율적이지 못 합니다. 자치조직권 역시 기구와 정원기준을 초과하여 여유기구를 설치할 수 없어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낙후지역의 경우, 기구축소 문제에 직면, 주민 서비스 공급에 차질이 발생하고 시급한 현안 발생시 한시기구와 소속기관 설치시 사전에 중앙부처와 협의토록 되어있어 유연한 조직운영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둘째, 국세와 지방세 비중은 8:2로 국세의 이양 등 지방세 규모 확대가 필요합니다. 전북의 경우 재정자립도 20%이하이고, 세입기반이 매우 취약하여 전국 15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13년 19.1%). 사회복지 예산의 지속적인 증가, 교육경비부담 수요 등 매년 늘어나고 있는 재정부담 완화를 위해서 지방교부세 법정비율을 상향 조정, 지방소비세 세율 인상 등을 통해 지방재정(자주재원)을 확충해야 합니다.

“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안전행정부 산하의 정부출연기관으로 지방자치와 관련된 다양한 정책연구보고서를 발간하고, 의원연찬 활동, 컨설팅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사님의 입장에서 저희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바라는 것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

지방행정연구원은 1984년 설립이후 지방행정, 재정, 세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제도개선, 지역개발 등을 통하여 지방자치 실현에 공헌해 왔습니다.

지방자치에 대한 최고 연구기관으로 중앙과 지방이 상생적이고 조화롭게 발전하고 장기적 안목과 균형자적 시각에서 지역모두가 고루 잘 수 있도록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실것을 당부드립니다.

지방행정정책 연구개발 통하여 무엇보다 지방을 국가발전동력화하기 위해서 지역발전의 주체로 인정하고 중앙과 지방이 책임을 분담하여 상생적으로 조화롭게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 주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대담·정리 : 김 필 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



전북에서 만나는 전통문화의 향연



한국 전통문화의 보고_ 전주 한옥마을



전주는 유네스코가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한 판소리의 본고장으로, 전통생활양식의 근간인 한옥·한식·한지 등 가장 한국적인 전통문화를 담고 있는 도시이다. 전주시 풍남동과 교동에 위치한 전주한옥마을은 1930년대를 전후하여 농업지주와 신흥자본가들을 중심으로 형성된 도시형 한옥으로, 빠르게 변하는 삶 속에서도 우리 전통의 예스러움을 고스란히 간직한 곳으로 유명하다. 한국의 전통 건물인 한옥(韓屋)이 800여 채 밀집돼 있는 한옥마을에 서서, 푸른하늘을 배경으로 금방이라도 날아갈 듯 부드러운 곡선을 그리는 처마 끝을 바라보자, 그러면 한옥이 주는 여유와 편안함이 밀물처럼 다가오고, 수많은 사람들이 전주한옥마을을 찾아 머물고 싶어 하는 이유를 이해하게 된다.



한옥은 남녀의 활동 구분에 따라, 크게 안채와 사랑채로 나누는 구조가 특징이다. 여인들이 생활하는 안채에는 규수방이 있고, 남자들이 사용하던 사랑채는 선비방으로 이뤄져 있다. 한옥의 또 다른 특징은 좌식생활에 맞게 깔아 놓은 온돌방이다. 방 밖에 아궁이(함실)을 만들고, 구들(아궁이 안쪽)밑으로 불을 때어 온돌이 따뜻하게 데워지는 구조로,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하다는

것이 온돌의 가장 큰 장점이다. 따로 마련된 한옥생활체험관은, 누구든지 선비방과 규수방에 머물며 직접 온돌방을 체험할 수 있다. 특히 이곳에서 제공하는 납청유기(納靑鑪器)에 담긴 전통한식은 한옥마을의 맛과 멋을 더해 주는 백미로 꼽힌다.

주변에 있는 경기전과 전동성당을 방문하여, 옛 것을 익히고 현재를 가늠하는 온고지신(溫故知新)의 기회로 삼자. 풍남문에서 동쪽으로 150m쯤 울창한 숲 속에 위치한 고색창연한 경기전은 사적 제339호이고, 조선시대 천주교도의 순교터에 1908년에 설립한 사적 제288호 전동성당은 평지에 세운 성당으로는 대구 계산동성당과 함께 가장 규모가 크고 이름답기로 이름난 교회당이다.

옷짐 없이 니들이하기 좋은 봄이다. '꽃집' 을 지닌 땅 전주 한옥마을에서 하루쯤 선비가 되어 전통문화를 몸소 익히고, 입맛을 돋우는 전주비빔밥으로 건강한 봄을 맘껏 누리자.

아름다운 사랑의 시작과 완성_남원 광한루원



지고지순한 사랑이야기, 소설 「춘향전」의 배경이 된 남원의 다른 이름은 '춘향골'이다. 광한루원은 성춘향과 이몽룡이 만난 정원으로, 사적 제303호로 지정되어 있다. 조선 세종 때(1419년) 황희 정승이 건립하여, 정유재란 때 소실됐던 것을 1638년에 재건했다. 성춘향과 이도령이 사랑을 시작하고 완성한 남원에서는 해마다 봄이 오면, 이들의 애뜻한 사랑이 춘향제로 되살아나 사람들의 마음을 설레게 한다.

올 해로 83회를 맞을 정도로 오랜 역사를 지닌 전통문화축제인 춘향제는, 매년 4월 마지막 주 금요일부터 5일간 (2013.4.26.~30) 전북 남원시 광한루원 일원을 무대로 한다. 첫날 행사는 '사랑의 광장'에서 판소리 학생부의 춘향국악대전으로 꾸며지고, 남원의 전통 민속을 경험할 수 있는 다채로운 행사들이 펼쳐진다.

사랑이 이루어지는 곳, 승월교는 광한루원과 남원관광다리를 잇는 보행자 전용 다리이다. 봄비 그친 뒤 떠오른 청명한 무지개를 닮은 이 다리를 걸으면, 남원을 가로지르는 도도한 요천강물이 한 눈에 들어온다. 요천 남쪽으로 이어진 1km 남짓한 산책로는 '동편제 거리'라는 테마로 꾸며져 있다. 수궁마당 · 적벽마당 · 심청마당 · 춘향마당 · 흥부마당에 어울리는 동판과 조형물로 판소리를 안내하고, 산책로 끝에는 국악공연이 열리는 음악분수광장과 야외무대로 이어진 영화같은 엔딩이 상춘객들을 기다리고 있다.

사랑의 마을 남원에는 광한루원과 춘향테마파크, 추어탕 골목 등 오감을 만족시키는 문화관광 요소들이 즐비해 있다. 탁 트인 길을 따라 여유롭게 산책하면서 풍요로운 남원의 명소들을 두루 돌아보노라면 '내 마음의 어딘 듯 한 편에/ 끝없는 강물이 흐르네'라고 읊조리던, 시인의 평화롭고 아늑한 시심을 닮아 한없이 맑아지는 기분을 느낄 수 있다.

정리 (주)소프트하우스 www.e-softhouse.com

연구원 동정

국가재난안전진단제도 관련 OECD 공동세미나

일 시 / 2013. 4. 30(화) 13:00~18:00

장 소 / 정부외교청사 별관 세미나실

주 제 / 안전행정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국립방재연구원

KRIIA 교육연수 [담당자: 이해선/ 02-3488-7353]

○ 제1기 사업예산과 복식부기회계

- 교육장소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강의실
- 교육일시 : 2013. 4. 3 ~ 4. 5
- 해당기관 : 전국 지방자치단체

○ 주민참여 역량강화 과정

- 교육장소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강의실
- 교육일시 : 2013. 4. 17 ~ 4. 19
- 해당기관 : 전국 지방자치단체



정기간행물 발간

● KRILA FOCUS (3월호)

- 지방자치단체 분쟁조정기능의 발전방안(류영아)

알림마당

최근 지방자치관련 핫이슈와 지방자치단체의 동향을 파악하여 시의적절한 대안을 제시하고 국·내외 우수한 사례 발굴에 주력하고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Newsletter가 지방자치 News&Issue로 새롭게 바뀝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는 Newsletter 알림마당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에서 발간되는 책자 및 소식지를 무료로 홍보해 드립니다. 홍보를 원하는 지방자치단체는 T 02-3488-7361 / yjtak@kriia.re.kr 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